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 14일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3차 TF 회의 개최
- LH, SH, GH, iH 등 4개 공공기관 참석하여 사업 추진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하였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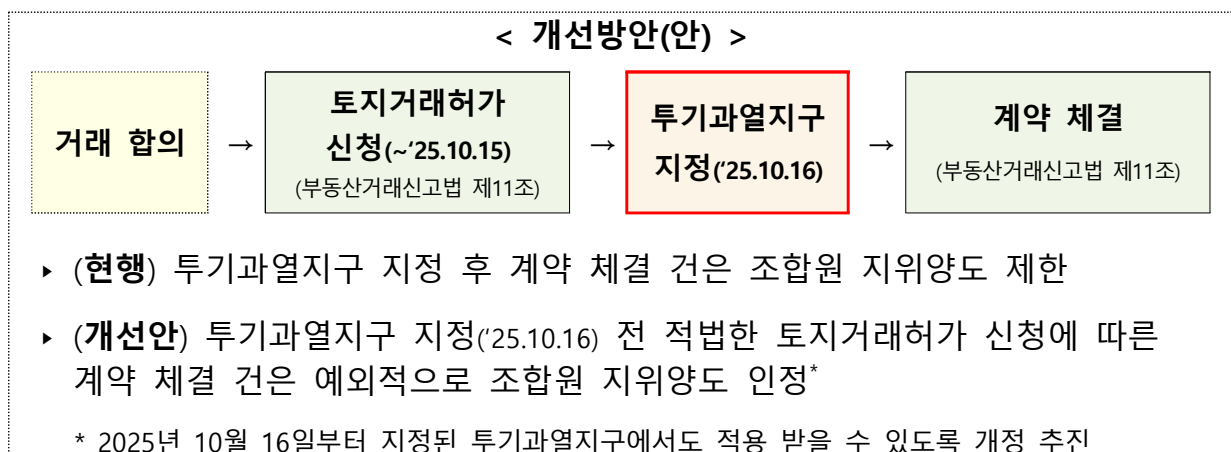
□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10.30)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되었다.

* 「공공주택특별법」(안태준 의원, 11.7):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통합조정회의·협조장려금)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었고,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하여
 - 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1-3364)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진홍민 (044-201-3366)
담당 부서 <정비사업>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담당 부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담당 부서 <신축매입>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박병관 (044-201-4533)
담당 부서 <노후공임>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용현 (044-201-4539)
		담당자	사무관	이혜인 (044-201-4514)
담당 부서 <공공택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044-201-4505)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1-4947)
담당 부서 <도심복합>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경호 (044-201-4380)
		담당자	사무관	박주연 (044-201-4388)

참고

9.7대책 주요 법률 발의 현황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담당 부서
1	공공주택 특별법	○ 지구지정 전 토지 등 협의매수 허용	권영진의원 발의 (25.1.9) 법사위 통과 (25.11.6)	공공택지 기획과
2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 통합심의 범위 확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특례 등	문진석의원 발의 (25.10.22)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3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협조장려금 신설 등	안태준의원 발의 (25.11.7)	공공택지 기획과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요 절차의 동시처리 등 절차 간소화 ○ 공공정비 용적률 완화, 건축밀도 제고, 국공유지 확보 지원 등 사업성 제고 ○ 재정착 지원, 전자의결 보안성 강화 등	문진석의원 발의 (25.9.30)	주택정비과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반 정비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윤종균의원 발의 (25.10.27)	도심주택 공급협력과
6	주택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문진석의원 발의 (25.2.20)	주택정비과
7	주택법	○ 주택법 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 ·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	손명수의원 발의 (25.9.30)	주택건설 공급과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설계변경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한 생숙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원활화	염태영의원 발의 (25.2.6) 법사위 통과 (25.11.6)	부동산개발 산업과
9	부동산거래 신고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천준호의원 발의 (25.9.5)	토지정책과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 신설	염태영의원 발의 (25.10.23)	도시활력 지원과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특례 도입, 주민대표단 제도화, 동의 인정 특례 도입 등 절차 간소화	한준호의원 발의 (25.9.22)	도시정비 기획과
12	토지보상법	○ 토지 수용에 따른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 도입	이연희의원 발의 (25.10.27)	토지정책과